

#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4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6. 29.

발 의 자 : 한정애 · 문진석 · 박홍근  
강선우 · 김성주 · 윤관석  
전혜숙 · 김경만 · 이탄희  
이원택 · 김주영 · 허종식  
이용우 · 권인숙 · 박성준  
황운하 · 맹성규 · 김희재  
의원(18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.

그런데 현행 법령은 해당 기업이 도산, 파산 등으로 사용자가 임금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 그 지급 요건을 제한하고 있음.

2019년 기준 임금체불금액 1조 7,217억원 중 체당금지급액은 26.7%인 4,599억원에 불과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임.

이에 기업의 도산, 파산 이외에도 휴업 · 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

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해당금을 지급하도록 그  
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임(안  
제1조 및 제7조).

##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”을 “지급받지 못한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퇴직한 근로자”를 “근로자”로 하고,  
같은 항 제3호 중 “고용노동부장관”을 “휴업·경영상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채당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 
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채당금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 행	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,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지급받지 못한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7조(채불 임금등의 지급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<u>퇴직한 근로자가</u>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「민법」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.	제7조(채불 임금등의 지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근로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 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<u>고용노동부장관이</u>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	3. <u>휴업 · 경영상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</u> 해당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

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	<u>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생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